

‘역대급’ 기대 무색, 사전투표율 35%… 아전인수 해석 분분

지역별 투표율 격차 선명

민주 진영 결집, 보수는 포기 분석
‘내란 심판’ 정서에 사전투표 열기 ↑
보수 강세 지역, 투표 불신 기류여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34.74%로 최종 집계되면서, 진영 간 유불리에 대한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대체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진영이 유리하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선 깨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수진영이 투표를 아예 포기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 지난 대선에서 깨진 공식이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42만3607명(34.74%)이 참여했다. 20대 대선 때 세운 최고 기록 36.93%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손진영기자 son@

비해 2.19%포인트 낮지만, 역대 2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22대 총선은 사전투표율이 31.28%였다.

첫날인 29일 사전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정치권에서는 ‘역대급’ 투표율을 예상했다. 그러나 이틀째인 30일 오후 들어 20대 대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낮았다. 그래도 사전투표가 통상의 경우처럼 주말을 끼치

않고 평일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지난 대선 못지않은 투표율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가 사실상 본투표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보고 있다. 사전투표는 꼭 지정된 투표소를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 근처가 아니어도 된다는 편리함이 강점이다. 사전투표가 시행되기 전에는 투표일에 일

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사전투표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는 투표일이 3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전투표는 지난 대선과 달리 민주진영에 유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12·3 내란 사태와 그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우르르 몰려나왔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인터넷 상에서는 ‘투표 마렵다’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내란을 투표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사전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튀어나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보다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정권교체 여론이 굳건해졌고, 보수진영 지지자들의 투표 의지는 낮아졌다. 그

렇기에 투표 자체를 포기해 본투표일에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혹은 보수진영 일부에 퍼진 부정선거론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극렬 지지층 사이에 팽배한 사전투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 강세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낮아졌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에는 영남권 유권자들이 본투표일에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섞인 예측이 구(舊) 여권에서 흘러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는 이번 사전투표율이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또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울산(32.01%) 모두 평균치를 하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높은 호남권은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56.50%로 가장 높았고, 전북(53.01%), 광주(52.12%) 등도 50%를 넘겼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보수 단일화 사실상 무산… 김문수, ‘자강론’ 집중

이준석 “비상계엄 세력과 단일화 없다”
한덕수·이준석 단일화 시도 모두 난항
국힘, TK·PK 결집통한 자력 승부 전환

6·3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평가받았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불발되며 국민의힘의 선거 전망을 어둡게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자정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담판을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찾았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불발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받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단일화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다만, 김 후보 측은 본투표 전까지 단일화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준석 후보는 연신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류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절하고 있다. /뉴시스

화가 불리한 선거의 3요소(구도·인물·바람)를 강화해 대선을 점전으로 이끄는 수단이라고 봤다. 선거 구도는 ‘민주 대(對) 반(反)민주’ 프레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야당 대표로

정치권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비해 김문수 후보가 주는 영향력은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 받았다. 김 후보는 전설적 노동운동가 출신에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사를 지냈으나 20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대구 수성갑에서 전 국무총리와의 대결에서 대패하며 주류 정치권과 멀어

지기 시작했다.

김 후보는 극우세력을 대표하는 자유통일당 창당에 참여했고, 경선 과정에서 친윤계와 당심의 지지를 받아 한동훈 전 대표를 꺾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토론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종 보수 단일화를 하고, 보수 빅텐트를 쳐 최대의 보수 결집을 이룬 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도 막판 단일화를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켜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중도보수에 호소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비판할 수 있는 적격의 후보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봤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이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후보 단일화는 시작부터 꼬였다. 김 후보 측은 경선에서 승리한 최종 후보와 외부 ‘용병’ 격인 한 전 총리가 동일한 조건으로 단

일화 협상을 하는 것은 절차적·민주적으로 맞지 않다고 집요하게 주장했다.

결국, 지도부가 당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까지 ‘후보 교체’를 실현에 옮겼지만, 전당원 투표에서 대선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며 김 후보는 가까스로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유통일당, 이낙연새미래민주당 삼임고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지지를 얻었으나 끝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는 단일화 협상에 돌입하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차별성을 드러내던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도 중도 성향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해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그대로 김 후보에 옮겨가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며 오히려 TK(대구·경북)과 PK(부산·경남)의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

사전투표 부실 도마에… ‘대리투표·반출 사고’ 잇따라

선관위 “통제 실패, 책임 통감” 사과
기표 후 식사·투표지 누락 자작극 의혹

지난 5월29~30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사례들이 노출돼 논란을 낳고 있다. 노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을 일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는 3일 본투표에선 선관위의 빈틈없는 선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인이 투표 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 야외에서 대기하거나 일부 투표자는 주변 식당에 다녀와 투표하

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신촌동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 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매수와 관외 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해 따로 반출된 투표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관위 관리 부실은 도마에 올랐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 용지 반출 사건을 두고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부실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고, 소수의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등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된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지난 5월 30일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강남구청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인 투표 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오전에 대리투표를 하고 오후엔 자신 명의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선거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5월 30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 경기 김포와 부천의 사전투표함에서 지난 22대 총선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가 1장씩 발견되기도 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끼어 수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투표함을 교체하거나 투표용

지를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사전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관위의 기본도 안된 관리 수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대선 전 ‘흠결 없는 선거’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은 지적해야 하는 사항이나 이를 침소봉대해 ‘부정선거론’으로 확대하는 세력이나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사전투표 과정 중 사전투표에 혼란을 주기 위한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태홍 기자

“상징의 땅서 마침표”

이재명 여의도, 김문수서울시청행

>> 1면 ‘21대 대선…’서 계속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아,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방지하고자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2일 서울·경기를 돌고 여의도공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모여 ‘빛의 혁명’을 일으킨 시민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후보는 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 서울시청 광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진 장소이기도 하다.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